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2기 내각 구성 핵심 보직 인선 가시화. 강경파 및 충성도 중시
 - COP29,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 메커니즘 합의. 트럼프발 기후대응 후퇴 우려도 병존
 - 중국 10월 위안화 신규대출, 예상치 하회. 민간부문 수요 부진 지속
 -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 금리인상 시점 관련 이견 존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 랠리 지속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1%), 달러화 강세(+0.5%), 채권시장 휴장(재향군인의 날)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차기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산주 강세, 미국 증시 호조 등으로 1.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등으로 상승세 유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7% 하락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재향군인의 날로 휴장
독일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우려 등으로 2주래 최저

※ 뉴욕 1M NDF 증가 1400.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01.3원, 0.02% 상승). 한국 CDS 약보합

		11/11일	11/8일	전일대비			11/11일	1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01.4	5,995.5	+0.10%	국제 금리 10y	미국	휴장	4.30%	-
	유럽	512.37	506.63	+1.13%		독일	2.33%	2.37%	-4bp
	중국	3,470.1	3,452.3	+0.51%		영국	4.43%	4.44%	-1bp
	일본	39,533	39,500	+0.08%	CDS 5y	한국	33bp	33bp	-0bp
	한국	2,531.7	2,561.2	-1.15%		중국	62bp	63bp	-1bp
환율	달러지수	105.50	105.00	+0.48%	위험 지표	EMBI+	-	365	-
	유로화	1.0655	1.0718	-0.59%		VIX	14.97	14.94	+0.20%
	엔화	153.72	152.64	-0.70%		WTI유	68.04	70.38	-3.32%
	위안화	7.2150	7.1841	-0.43%	원자재	구리	422.9	430.6	-1.80%
	원화	1,401.0	1,397.0	-0.29%		금	2,618.8	2,684.8	-2.4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2기 내각 구성, 핵심 보직 인선 가시화. 강경파 및 충성도 중시

-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에서 강경파 성향 여부와 충성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 이는 1기 재임 당시 주요 인사들과 갈등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된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 특히 연준 파월 의장과 의 갈등 경험 등이 이러한 기조에 영향
- 현재까지 인선이 확정된 인원은 3명.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를 수석 보좌관으로, 前 이민 및 세관단속국장인 톰 호먼을 국경 담당자로 내정. 또한 유엔 대사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을 지명. 향후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에 이민 관련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前 선임보좌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도
- 향후 주요 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국무장관 후보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리처드 그레넬 前 독일 주재 미국대사가 물망. 재무장관 후보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월가 경험자를 선호하는 가운데 빌 해거티 상원의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등이 거론. 무역대표부 대표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 대표가 유력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주요 정책도 강경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 이를 반영하여 다수의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예상. 특히 국제 사건 개입을 주장하는 인사는 제외될 방침이어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강화될 가능성
- 아울러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로젝트 2025’의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180일을 위한 지침서 준비.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공동 방위 강화(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법인세 인하, 화석연료 생산 확대 및 환경규제 완화 등을 포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COP29,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 메커니즘 합의. 트럼프발 기후대응 후퇴 우려도 병존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합의. 이는 개도국 기후대응과 주요 탄소배출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전망.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기후변화 대응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발언

■ EU, 중국과의 전기차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 단기간 내 합의 도출 어려울 소지

-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중국과의 전기차 관세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

■ 중국 10월 위안화 신규대출, 예상치 하회. 민간부문 수요 부진 지속

- 10월 총사회융자규모는 1.4조 위안으로 전년동월치(1.8조 위안) 및 예상치(1.5조 위안) 하회. 신규 은행대출은 5,000억 위안으로 3개월래 최저. 이는 민간부문의 신용수요가 취약하다는 의미로,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저조한 상황

■ 중국의 금년 무역흑자, 사상 최대 규모 예상. 통상 마찰은 심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존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무역흑자가 연간 1조 달러에 육박. 금년 1~10월 상품 무역흑자는 7,8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흑자가 모두 확대되어 해당 국가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소지

■ 일본은행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 금리인상 시점 관련 이견 존재

- 다수의 위원들은 미국 대선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엔화 움직임이 추가 금리인상 시기 결정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 한편 일부 위원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위원은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일본의 추가 경기부양책, 저소득층 현금 지급과 반도체·AI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

- NHK에 따르면, 당국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계획. 이는 저소득층 가구 현금 지원, 자국 반도체 및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30년까지) 등의 형태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방침. 이시바 총리는 이번 경제패키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이 지난해 13조엔을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12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이사·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
- 독일 10월 소비자물가, 영국 9~11월 실업률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권고, 공화당은 하원 선거 승리 근접

- **트럼프, 푸틴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중단 권고** : 트럼프는 당선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나서지 않도록 권고. 또한 두 정상은 유럽의 평화 목표를 논의했고 이와 관련된 추가 대화에도 관심
 -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해당 소식이 허구이며 잘못된 정보라고 강하게 부인
- **공화당, 하원 선거 승리에 근접** :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증가(과반수 기준: 218석. 현재 공화당 214 vs. 민주당 203). 만일 '공화당의 백악관 및 상하원 장악(Red Wave)'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법제화되고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
- **트럼프, 내각 구성 시 '상원 인준 우회' 요청** :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휴회 임명(recess appointment)'에 동의해야 한다고 발언. 이는 상원의 인준이 없어도 내각 인사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는 의미로 신속한 내각 구성 의지를 반영.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반대 등 절차상 문제로 공식 임명에 오랜 시간 소요
- **해거티 상원의원, 한국도 일본처럼 국방비 증액 필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 후보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협상을 위한 의도라고 평가. 다만 일본이 국방예산을 GDP의 1%에서 2%로 늘리기로 동의했는데, 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
 - 대만과 필리핀은 방위비 증액 요구 우려로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검토
-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치** :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장중 8만8천달러 돌파(바이낸스 기준). 이는 트럼프의 친디지털자산 정책 기대 등에 기인

■ [해외시각]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역풍 초래할 우려. 對美 무역흑자국은 주의 필요

-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는 역풍에 직면할 위험**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 추진하면 기존 우방국들의 신뢰를 잃을 소지. 특히 우방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Reuters)
- **對美 무역흑자 규모 큰 국가는 주의 요구** : 중국 뿐 아니라 한국, 대만, 베트남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은 차기 미국 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 노력으로 관세인상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Goldman Sachs)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경제 여건, 트럼프의 정책 공약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 - 블룸버그

(Trump Inherits an Economy at a Tricky Time)

- 내년 1월 트럼프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미국 경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하지만 노동시장 냉각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률은 1/4분기 이후 둔화. 또한 트럼프는 정부지출 제어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데, 최근 세금에 의존하는 정부부문 및 보조금 지급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
- 아울러 신재생 산업 촉진 등 기존에 진행 중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면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될 우려. 또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경기를 둔화시키고, 많은 기업에 불확실성을 부여.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2기 정부는 공약을 시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

■ 미국의 對중국 대규모 관세 부과, 현실화 시 충격은 이전보다 적을 가능성 - 블룸버그

(What Will China Do If Trump Deals Tariff Blow?)

-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면 중국 GDP는 향후 12개월 동안 2%p 감소 예상(Macquarie).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중국 경제 신뢰에 대한 타격은 '18~ '19년에 비해 적을 소지. 첫째, 미중 무역 갈등은 7년째 이어져 경험적 대응 가능. 둘째, 공급망이 다변화되었고,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이전보다 감소
- 셋째, 중국 상장기업의 북미 수익은 이전에 비해 큰 폭 감소. 이에, 중국은 트럼프 관세 대응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미국 기업 규제, 국물을 포함한 미국산 수입 축소 등 보복적 측면과 미국 에너지 추가 구매, 대규모 미국 투자 제안 등 회유적 방법까지 다양한 옵션 행사가 가능

■ 주요국 소비자의 고물가 인식, 정치권에 대한 압력 가중될 전망 - 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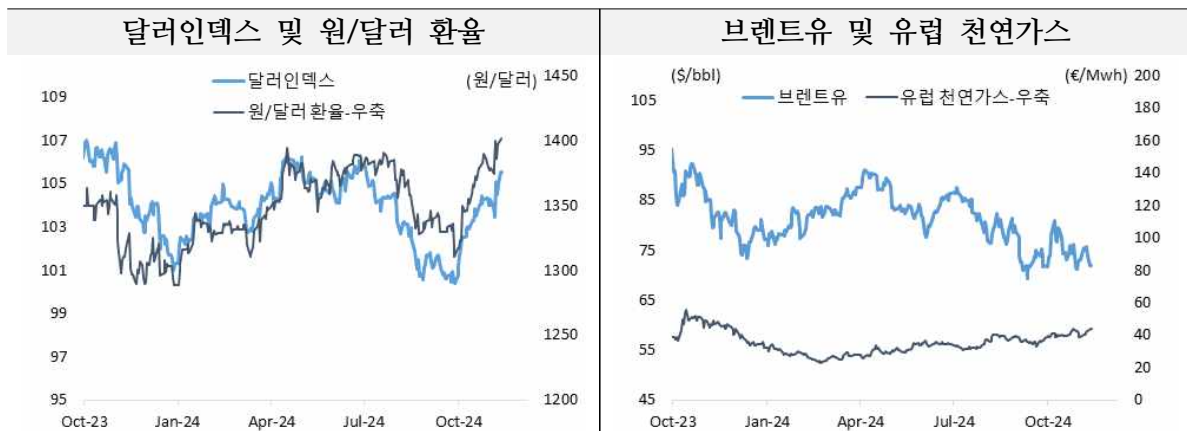
(Consumer anger over high prices piles pressure on politicians)

- 미국 대선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불만이 트럼프 지지를 견인. 또한 전문가들은 영국과 일본 등 각국 선거에서도 높은 생활비에 대한 분노가 정치 판도를 결정했다고 진단. 아울러 내년 독일과 캐나다 총선에도 유사한 영향이 예상
- 9월 기준 OECD 부유국 그룹의 평균 인플레이션(연율)은 각국 중앙은행 목표(2%)에 근접했지만, 그룹 전체의 '19년 12월 대비 평균 물가는 약 30% 상승(식품은 50% 급등)하며 소비자의 어려움 가중. 아울러 소비자 신뢰도 팬데믹 이전보다 1.7%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유권자는 정치적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